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9581
----------	------

발의연월일 : 2021. 4. 19.

발 의 자 : 양이원영·강득구·강병원
강선우·강준현·강훈식
고민정·김경만·김두관
김민철·김병욱·김병주
김상희·김성주·김성환
김수홍·김영배·김영진
김영호·김용민·김원이
김정호·김주영·김한정
김홍걸·남인순·노웅래
도종환·문진석·민형배
박영순·박재호·박 정
박찬대·박홍근·백혜련
서삼석·서영교·서영석
소병훈·송갑석·송기헌
송옥주·송재호·신동근
신영대·신정훈·안민석
안호영·양경숙·양기대
양향자·어기구·오기형
오영환·용혜인·우원식
위성곤·유정주·윤건영
윤미향·윤영덕·윤재갑
윤준병·이규민·이동주

이병훈 · 이성만 · 이소영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용빈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이해식 · 임오경 · 임종성
임호선 · 장철민 · 정일영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정필모 · 조오섭 · 주철현
진성준 · 천준호 · 최기상
최종윤 · 최혜영 · 한준호
허영 · 허종식 · 홍성국
홍정민 · 황운하 의원
(10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오염수 방출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 이행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물론이고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자국 어민들의 반대도 무시한 독단적인 조치다.

해양방출 결정으로 2022년 포화 시점을 기준해 약 137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되게 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사고 원전 폐로 시기가 막연한 가운데 방출 기간 역시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에 저장 중인 오염수 중 약 71%가 핵종별 배출기준치를 초과했고, 14%는 10배에서 100배 이상이며 5%는 100배에서 최대 2만배

가까이 높다(2020.12.기준).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주요 62개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프스로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는 고시농도 한도(60,000Bq/L)의 40분의1(1,500Bq/L) 수준으로 희석해서 방출한다고도 밝혔다.

기준치 미만 저선량이라도 해양생태계와 인류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계도 확답하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에 따른 국제 규제기준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권고에는 저선량에서도 선량 증가에 따른 암이나 유전영향 발생확률이 정비례로 증가한다는 가정도 함께 기술돼 있다. 또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도 저선량에서도 위험이 증가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인근 바다 방사능 농도가 미량이지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매년 발표하는 해양생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슘137 최고 방사능 농도는 삼치에서 발견된 184mBq/kg 이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253mBq/kg에서 2015년 307mBq/kg, 2018년 288mBq/kg으로 늘었다. 기준치 미만의 극미량이지만 원전사고 이전과 비교해 방사능 농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십 년 간 해양으로 방출된다면 우

리 바다 해양생물 방사능 농도 역시 더 높아지고, 어업 등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과학계에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인접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해양방출이 강행될 경우 그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로 전가될 것이다.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국제법 위반 소지도 크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등 관련 국제법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과학위원회(UNSCEAR)가 채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은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는 엄중한 행위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